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11월 21일

프린트 | |

<時評>

日 ‘집단적 자위권’ 앞서 주변국 우려 없애라

박철희/서울대교수, 일본연구소장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제3국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과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하고 있고, 미·일 안보조약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평화헌법 제9조 1항 때문에 일본은 이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아베 신조 내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적극적인 해양 전략,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방위 원칙을 적극적 방위 정책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제3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에만 반격한다는 전수 방위에 그치지 않고 동맹국을 공격할 때에도 반격한다는 확대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해석은 평화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일본 국민의 절반이 여전히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다.

국방비가 대폭 삭감된 데다 연방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고도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 공약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미·일 간 ‘2+2’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에 백지 위임장이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일본의 적(敵) 기지 공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전몰자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이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를 가진 한국은 퇴행적 역사 인식을 가진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군사적 보통국가가가 되려는 움직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자위대 활동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전후(戰後) 일본은 평화국가이자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는 민주국가다. 일본이 팽창적 침략을 마다하지 않을 불량국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제3국에 의해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 방어하자는 논리를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것이 바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토에서의 작전 전개 허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 1998년 주변사태법이 통과될 당시부터,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는 지나치게 확장적이고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지리적 범위를 주변 지역을 넘어서 해양 안보 일반 및 국제질서 교란 사태까지 포함하

려 한다든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를 미·일 동맹에 한정하지 않고 유엔의 행동이나 자위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고려하고 있는 점,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사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견지하고 있는 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억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의 의사(意思)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사의 퇴행적 인식에 기인한 망언과 과거 미화(美化) 행위를 단절함으로써 일본이 전전(戰前)으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주변국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본이 앞장서서 입증해야 한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